

CEO FOCUS: 기업인 의견 조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 방향

2024. 3.



부산상공회의소

〈조사 개요〉

1. 조사명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2. 조사 목적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 대상

- 부산지역 상장사 및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조사 응답 157명)
 - ❖ 기업 회장(오너) 또는 경영인(임원 이상) 대상으로 조사 실시

4. 조사 방법

- 조사표 기반 설문조사(FAX, 이메일 등을 활용한 조사)

5. 조사 내용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상속세 제도 개편 및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에 대한 의견
- 부산의 비즈니스 인프라 평가 및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견

6. 조사 기간

- 2024. 2. 19. ~ 3. 19.

I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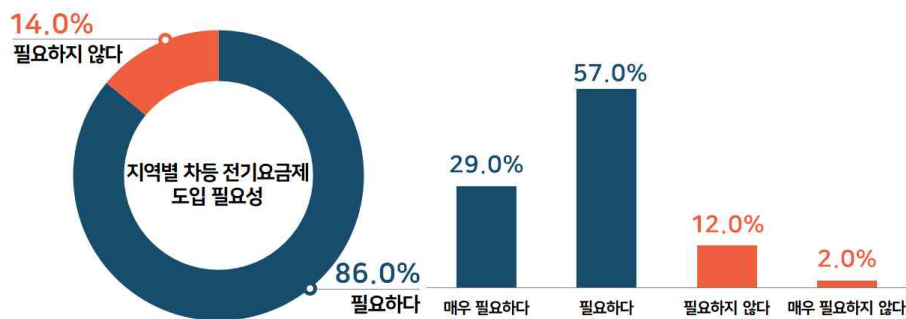
□ 지역 기업인 86.0%,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 지역 기업인에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 14.0% 순으로 나타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3. 6. 13.) 제정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부산은 전력자급률이 높고,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많은 상황(전력자급률=발전량/판매 전력량*100)

❖ 2022년 기준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2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2위 - 충남(214.5%), 3위 - 인천(212.8%)



2.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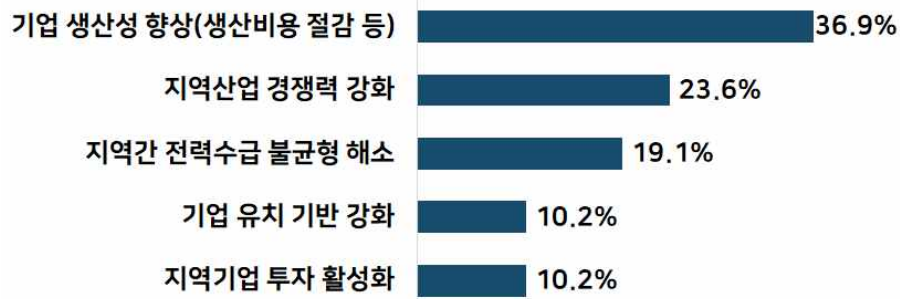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기업 생산성 향상' 기대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점에 대해 묻은 결과 '기업생산성 향상'이 36.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음

- 이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23.6%,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19.1%, '기업유치 기반 강화' 10.2%,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 10.2% 순으로 나타남

-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대비 발전량이 많은 부산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생산/관리 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인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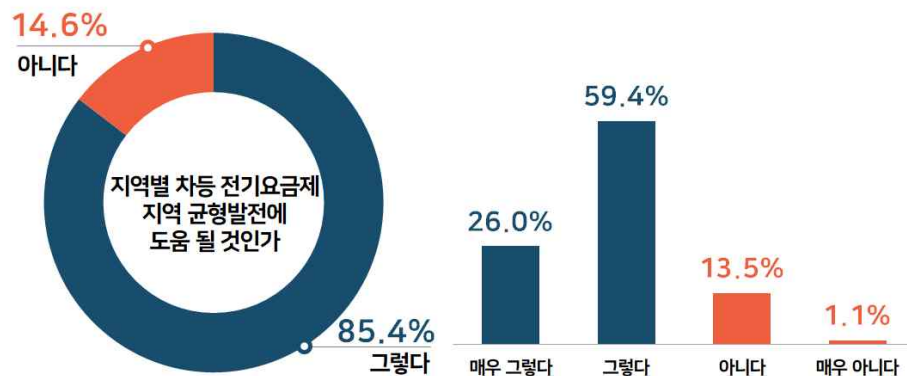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대효과>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5.4%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26.0% + 그렇다 59.4%)인 응답을 보였으며, 14.6%(아니다 13.5% + 매우 아니다 1.1%)만이 '부정적'으로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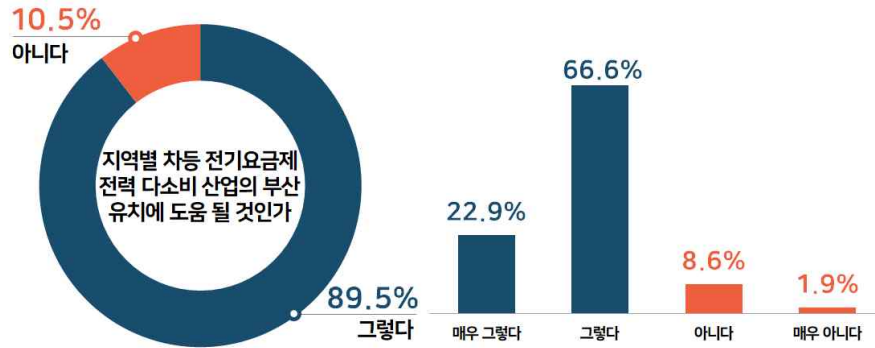
- 지역 기업인들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집종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급률이 높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전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될 수 있음



□ AI·데이터 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 될 것

○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9.5%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22.9% + 그렇다 66.6%)으로 응답, '부정적'(아니다 8.6% + 매우 아니다 1.9%)인 응답은 10.5%에 그침

-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AI, 반도체 산업 등이 대체부지로 부산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부산의 항만, 공항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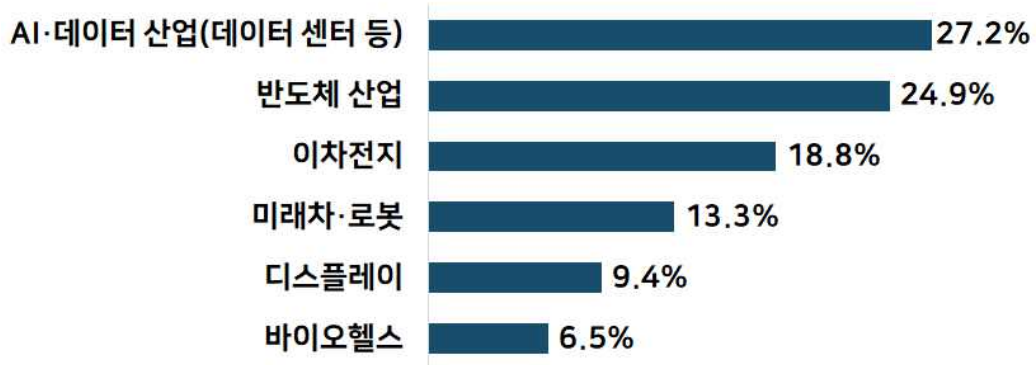


□ 부산에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AI·데이터 산업

○ 전력다소비 업종 중 부산에 유치했을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AI·데이터 산업’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반도체’ 24.9%, ‘이차전지’ 18.8%, ‘미래차·로봇’ 13.3%, ‘디스플레이’ 9.4%, ‘바이오헬스’ 6.5% 순으로 집계
- AI·데이터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산업에서의 파급력이 큰 업종으로 기존 지역산업 생태계와의 융합을 통한 성장이 기대
- 또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산업인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부산에 유치했을 경우 가장 파급효과가 큰 업종>



II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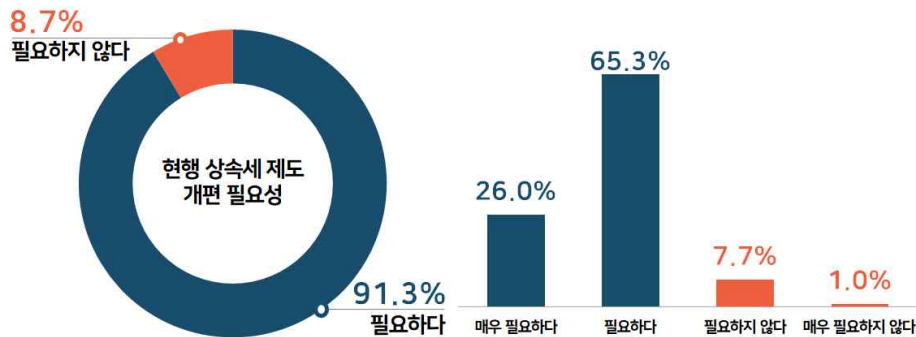
1. 상속세 제도 개편 필요성

□ 지역 기업인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응답

○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지역 기업인의 91.3%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7%에 그침

- 선진국 대비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 활동 위축과 가업승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역 기업인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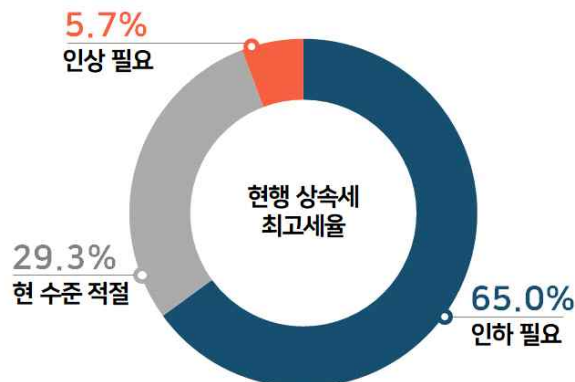
❖ 국내 상속세율은(최고세율 직계비속 상속 기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은 27.1%



□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

○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65.0%가 '인하 필요'라고 답했으며, 이어 '현 수준 적절' 29.3%, '인상 필요' 5.7%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기업인들은 현행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체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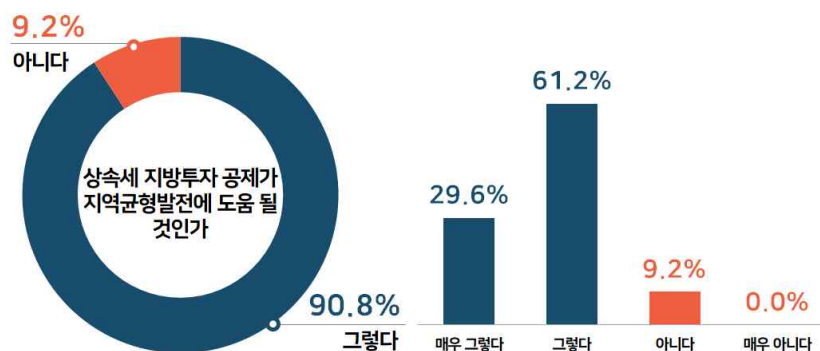


2.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에 대한 의견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를 상속세에 신설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90.8%의 기업인이 '긍정적'(매우 그렇다 29.6% + 그렇다 61.2%)인 답변을 보였음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 이전 또는 신규 투자시 투자액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된다면,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중견기업이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 주요 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이전 또는 신규 투자시 투자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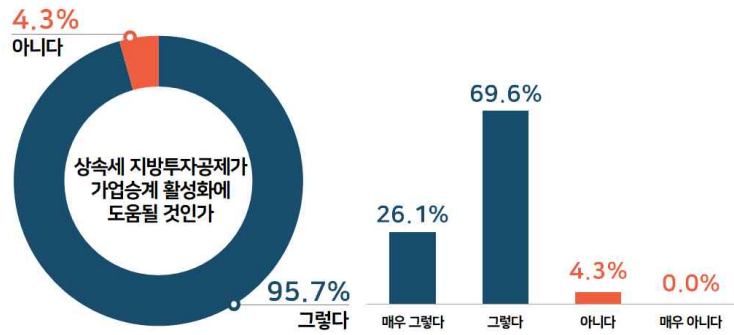
■ 대상기업 범위

-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본사 지방 이전 또는 사업장 신규 투자
-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소재지 내 신증설을 위한 신규 투자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는 가업승계 활성화에 도움 될 것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가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95.7%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26.1%, 그렇다 69.6%)인 답변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4.3%에 그침

-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 대기업의 가업승계가 활성화 될 것
-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과 투자가 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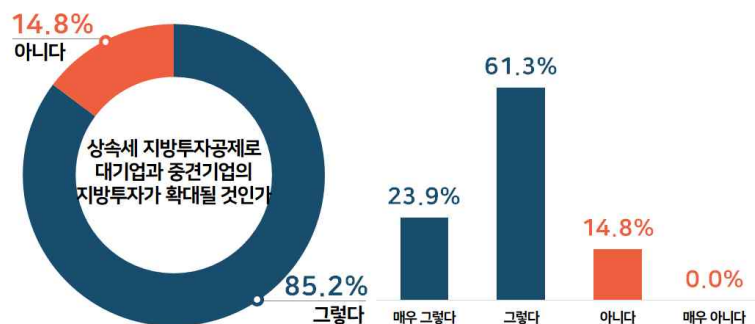


3.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기대 효과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될 것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 투자가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5.2%의 기업인이 ‘긍정적’(매우 그렇다 23.9%, 그렇다 61.3%)인 답변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4.8%로 나타남

- 기업승계가 필요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속세를 부담하기보다 지방에 투자를 확대 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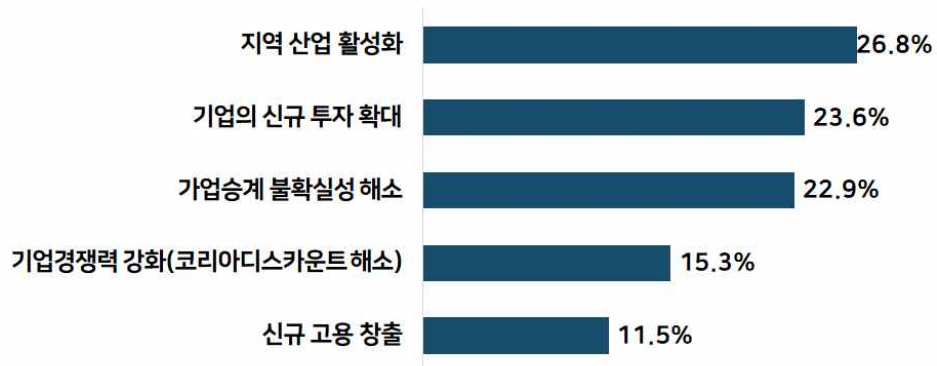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시 ‘지역 산업 활성화’ 가장 기대

○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 산업 활성화’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이어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23.6%, ‘기업승계 불확실성 해소’ 22.9%, ‘기업경쟁력 강화(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15.3%, ‘신규 고용 창출’ 11.5% 순

- 역외기업의 신규 투자나 본사 이전 등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Ⅲ 부산의 비즈니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1. 부산의 비즈니스 인프라 평가

□ 지역 기업인은 부산의 물류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았음

○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고려할 때, 다른 지방 대비 부산의 비즈니스 인프라 경쟁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물류 인프라’가 3.64로 가장 높았음

- 이어 ‘관광 인프라’ 3.55, ‘전시·컨벤션 인프라’ 3.36, ‘금융 인프라’ 3.08 등이 평균(3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에너지 인프라’ 2.94, ‘제조업 인프라’ 2.89, ‘인력 수급(인재풀)’ 2.78, ‘첨단산업 인프라’ 2.70 등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음
- 차등 전기요금제나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으로 역외기업이 지방투자를 확대 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 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 필요

<부산의 비즈니스 인프라 경쟁력에 대한 지역 기업인 의견>

5점(1~5)점 척도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타 지방 대비 강점 있다는 것을 의미)

타지역 대비 우위		타지역 대비 열위	
물류(해운·항만, 항공 등)	3.64	에너지 인프라(원자력 등)	2.94
관광 인프라	3.55	제조업 인프라	2.89
전시·컨벤션	3.36	인력수급	2.78
금융 인프라	3.08	첨단산업 인프라	2.70



2.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견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특례 지원 중 국제물류 거점 조성 가장 기대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특례 지원 중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는 ‘국제물류 거점 조성’이 45.9%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이어 ‘디지털·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20.4%,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문화 기반 조성’ 13.4%,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8.9%, ‘각종 규제 및 조세 완화’ 7.0%,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4.5%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기업인은 부산의 물류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만큼, 특별법에 담긴

신공항과 신항, 철도를 연계한 규제 자유구역 조성을 가장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첨단 산업 육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건립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서 기대되는 분야>

